

# “고액 상습체납자 엄정 대응할 것”

문 대통령, 반부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서 ‘반부패 개혁 지속 추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제청과 관련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에서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황서중 인사혁신처장,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제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부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고민정 대변인, 조한기 1부수·박상훈 의전·복기왕 정부·여현호 국정홍보·김영배 민정·박형철 반부패·최강욱 공직기강·김영식 법무·이광호 교육·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뉴시스

## “북-중 정상, 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중외교부, “정상회담서 새시대 방향 제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루강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양당, 양국 최고지도자는 회담에서 공동 관심사와 양국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특히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측은 70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과정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시대 양국 관계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양측이 (회담에서) 자국의 현재 상황을 상대방에게 소개하고 동시에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양국 정상 회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제 때에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정오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오후에 곧바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뉴시스

## 국가·전북발전 정책·비전 연구

전북연구원-민주연구원 상호 협력 위한 협약 체결  
실효성 있는 민생의제 발굴 정책·입법 반영 기대

전북도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2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호 연구 협력 및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전북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국가와 전북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상호 관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연구 및 정책 성과가 국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 의제와 정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협력 등은 양 기관의 비정치적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접견하는 송하진 도지사

20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송하진 도지사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입법 의제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정책을 개발·반영하고, 나아가 전북도민과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靑, NSC 상임위서 ‘北어선’ 논의… “엄중히 인식, 재발 방지 강구”

청와대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동해 삼척항을 통해 귀순한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 “타다’ 인·허가 즉시 중단해야”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전북 정읍·고창)는 김경진 국회의원과 함께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 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종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였다.

유 원내대표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5월 초, 가입 회원 50만 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 하였고,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대표는 이에 대해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정부가 각급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타다’를 비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도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해의 순방 때는 관련 임원을 동행시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뒷짐만 받고 꿀 먹은 벼

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안일함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 여당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 행안부 “지방공공기관장

자의적 직원 특채 못한다”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장이 자의적으로 직원을 특별채용 할 수 없게 된다.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없애고,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규모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후속 조치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